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제5호

신뢰사회를 저해하는 허위기만정보 대응방안

송근혜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주요사업인
“국가 지능화 기술정책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 요약 ◆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희망하는 디지털 탈바꿈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예컨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동화된 무인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맞춤형 추천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확증편향을 심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 사회, 산업, 공공분야의 문제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디지털 탈바꿈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탈바꿈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해결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우리나라 디지털의 선호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탈바꿈은 자유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차별없이 공정한 기회가 창출되며,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개인, 사회, 산업, 공공의 4개 분야에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사회분야의 두 번째 과제인 “신뢰사회를 저해하는 허위기만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다.

📖 들어가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기만정보가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

- 사회 전반에 신뢰가 확충될수록 규제가 줄어들고 기업투자도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의 신뢰 지수는 낮은 편
 - 신뢰는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임
 - ※ 사회적 신뢰가 10%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GDP가 0.4%포인트 상승(대한상의, 2020)
 - ※ OECD(2017)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신뢰도와 1인당 GDP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0.67) 존재
 - 신뢰가 축적될수록 사회구성원들 간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과 협력이 촉진될 수 있음
 - ※ 신뢰는 정보부족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기업 간 거래 및 협력 활성화에 기여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23위로 하위권이며, 1인당 실질 GDP 대비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도 평균 이하임
-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기만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임
 - 세계경제포럼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기만정보를 사회를 위협하는 10대 요소 중 하나로 선정
 - EU 집행위의 조사에서 허위기만정보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선정됨
- 허위기만정보(disinformation)는 누군가를 오도(mislead)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고의성 없이 잘못된 정보를 우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misinformation) 및 고의성 없는 잘못된 정보(false information)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허위기만정보는 타인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거짓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그동안 사용되어 온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표현이 뉴스에 국한되어 있으며, 힘 있는 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보도를 묵살하기 위해 오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옴
 - ※ 가짜뉴스(fake news)는 허위정보의 새로운 생산방식(예: 딥페이크 등)과 유통방식(예: 트롤링), 그리고 인간이 관여하는 방식(예: 공유, 댓글 등)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함
- EU, 영국을 선두로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를 공식용어로 사용할 것이 권고되어 옴
 - ※ 허위정보라는 용어는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자뿐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 네트워크 등 ICT 기술을 통해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증폭되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 음성자동시스템, AR/VR 등 신기술에 의해 생성·유통·조작될 가능성'을 모두 포괄
- EU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고의로 대중을 기만하여 공익을 해치기 위해 제작, 제시, 배포된 정보로서 허위사실 입증 가능한 정보'로 허위정보를 정의하며 규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잠재적 불법 정보로 설정
- 영국은 '타인을 오도할 의도를 가지거나 정치적,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조작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허위정보를 정의
- 우리나라는 방통위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으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

최근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AI 등, ICT 신기술로 무장하며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의 강도와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최근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기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준의 강도와 범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기존의 허위정보가 주로 특정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와 국소적인 수준의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 최근에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 전반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파급력이 커짐
 - ※ AI 등 ICT 신기술로 인해 허위정보의 생성이 정교해지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범위가 개인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확대(예: 코로나 백신 루머 등)되고 있음
 - ※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기업, 사회의 피해 추정금액은 연간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막대함 (현대경제연구원, 2017)
- 특히 AI 등 ICT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는 딥페이크, 소셜봇, 트롤링 등의 방식으로 정교하게 생성·유포되어 개인의 인지(심리)를 해킹하고 있음
 - ※ 인지적 해킹은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식을 조작하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
 - ※ 소셜봇은 편향된 정보와 메시지를 대량 생성 및 유포하여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
 - ※ 트롤링은 타인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고자 적대감을 부추기거나 거짓 비난의 글을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게시
- 신기술이 합쳐져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정보량에 의한 효과', '진실 착각 효과' 등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득 메커니즘을 강화
 - ※ (정보량에 의한 효과) 정보가 풍부한 환경에서 다수가 인정하는 정보(예: 좋아요 클릭 수)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효과

허위정보는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 (진실 착각 효과) 허위기만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진실로 착각하게 되는 효과
-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정교하게 진화된 허위기만정보는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음
 - 유럽의 학계를 대변하는 ‘전 유럽 아카데미(ALLEA)’에서는 ‘거짓정보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과학적 근거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
 -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사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치료와 예방법이 온라인에서 확산
 - ※ 기후위기에 대한 방대한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금융지원을 받아 과학적 증거에 대항하기 위해 선별된 정보와 음모론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
- 이처럼 허위기만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리며 사회 정의와 결속을 와해시키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들은 허위기만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하며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제20대 국회에서 약43건의 법률이 제안될 만큼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허위기만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협의의 정의(가짜뉴스 관점에서 주로 논의),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인해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에 직면해 있음

해외 허위기만정보 대응 현황

□ 국제 공동대응

- 글로벌 국제 기구들이 UN에서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허위기만정보, 프로파간다에 대한 공동 선언문’인 ‘비엔나 공동성명’을 발표
 - ※ 참여기구로는 ‘UN 특별보고관’,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자유담당관’, ‘미국 각주의 대표기구’,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있음
 - 허위기만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비정부 주체가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정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상호 견제할 수 있으며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
- 제49차 UN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호주, 미국, EU 등이 공동 제안한 허위기만정보 대응 결의안을 '22년 4월 채택하였음

국제기구는 허위기만정보가 인권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국가가 주도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

EU는 허위정보만정보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만연하다는 점을 집중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허위정보만정보에 대한
행동규약'을 마련

독일은
네트워크법집행법에서
허위정보만정보를 기존
형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표현물로 통일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독일정부는 허위정보만정보
대응을 위한 AI R&D
프로젝트를 3년간 총
1,500만 유로 규모로
지원

- 인권을 해치는 허위정보만정보의 영향에 맞서는 사회적 대응력을 국가가 주도하여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

□ EU

- EU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만정보 대응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허위정보만정보에 대한 행동규약(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제정
 - 허위정보만정보 제공자의 경제적 이익 차단, 정치적 후원을 받은 광고성 정보에 대해 자금 출처 밝히기, 허위 계정을 탐지하고 폐쇄하는 기술 개발 등, 온라인 상 유포되는 허위정보만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규약을 담음
 - '21년 5월에는 EU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의 통일성 강화, 모니터링 체계 신설,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독려 등, 개선 사항을 담은 개정안 발표
 - ※ EU 팩트체커 네트워크 기구 설립, 허위정보만정보 대응 플랫폼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사업 등, 허위정보만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독일

- 독일은 온라인 허위정보만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위반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을 '17년 10월 발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셜 네트워크 상 혐오 및 차별적인 표현을 신고·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 네트워크법집행법은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한 법률임
 -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범죄 및 테러 모의, 혐오 선동 등, 독일형법 22개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 표현물의 온라인 유통 차단이 주요 목적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3년간 총 1,500만 유로를 투입하여 허위정보만정보 퇴치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R&D 프로젝트를 지원
 - 허위정보만정보를 사회통합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목적임
 - ※ 온라인 허위정보만정보 식별, 확산경로 분석, 허위정보만정보에 대한 정교한 클러스터링을 통한 위험성 기준 확보, 설명가능한 AI 등
 - 정부의 '디지털, 안전, 주권' 연구 프로그램을 근거로 R&D 예산 마련

□ 프랑스

- 프랑스는 허위정보만정보의 정치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만정보의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조작투쟁법'을 '18년 12월 발효

프랑스는 정보조작투쟁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와 자율규제 강화 지침을 마련

- 정보조작투쟁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와 자율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규제가 적용되며, 허위기만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검찰, 후보자, 정당, 혹은 관계자의 의뢰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 의도적이고 자동으로 대량 유포되는 허위기만정보를 대상으로 함
-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에 허위기만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권한 부여
 - ※ 허위기만정보를 제시한 해외 방송사 차단 권한, 방송중지 명령 권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동 관리 등의 권한을 정보조작투쟁법을 통해 부여

□ 미국

미국 정부는 해외발 허위기만정보를 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

- 미국 정부는 타국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들이 생성·유포하는 허위기만정보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
 - 국무부는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차관’ 산하에 ‘Global Engagement Center’와 ‘Technology Engagement Team’을 두어 허위기만정보에 대응
 - ‘Technology Engagement Team’은 민관협력 조직으로, 허위기만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
 - ※ 미국 내 싱크탱크와 연계하여 허위기만정보 관련 다양한 R&D 프로젝트 운영
- DARPA,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도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 DARPA는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미디어 포렌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딥페이크 탐지 경진대회 후원, 메타는 허위기만정보 링크 식별 및 신뢰 콘텐츠 상위노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음
 - ※ 메타는 '19년에 페이스북 스팸성 게시물의 99%를 AI 알고리즘으로 적발
 - 구글은 '19년 2월, ‘허위기만정보 방지법 보고서’를 발간하며 온라인에 유포되는 허위기만정보의 특징과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미국 ICT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허위기만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R&D를 수행하고 있음

□ 소결

- 해외 주요국들은 5년 전부터 허위기만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허위기만정보의 유형과 영향력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 마련 및 기술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음
- 해외 주요국들은 또한, 안보의 관점에서 해외발 허위기만정보를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은 안보적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국내의 사회

적 통합(신뢰)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허위기만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향후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소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증가하고 관리 의무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며, 허위기만정보의 기술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R&D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큼

📄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한 국내 현황 및 주요쟁점 사안

- 우리나라에서도 허위기만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해옴
 - 제20대 국회에서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률안만 43건에 이르며, 정부 부처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서 허위기만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
 - ※ 제20대 국회에서는 허위기만정보 대응 관련 법률안 중, 딥페이크 관련 두 개의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
 - ※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서 복합정보(음성, 영상, 위치 등)를 이용하여 시를 향한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을 구체화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허위기만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허위기만정보의 개념정의, 플랫폼사업자, 정부, 언론, 시민 등의 실천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옴
 - ’20년 3월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허위기만정보의 확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책임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허위기만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발표
 - ’22년 4월에는 ‘허위기만정보 홍수 속 팩트체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6억 1천억원을 투입하여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였음
-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존재
 - (쟁점 1) 허위기만정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작업 필요
 - ※ 지난 ’21년 9월, 허위기만정보 대응 등의 조치를 담은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 등의 이슈로 부결되었음
 - (쟁점 2) 허위기만정보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성·유통되고 있으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 필요
 - ※ 안보 차원에서 허위기만정보를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허위기만정보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옴

국내에서는 허위기만정보
대응과 관련하여 국내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존재

- (쟁점 3) 현재는 자율규제 방식 이외에 합리적 대안이 부재하며, 기존 법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과 허위기만정보의 파급력 향상에 따른 새로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상황
 - ※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률안에서는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해 새로이 법을 제정한 안건보다 기존 법률 개정안 수가 훨씬 많았음
- (쟁점 4)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한 신기술 응용·활용 연구에 대한 논의 미흡
 - ※ 최근 AI를 활용해 온라인상의 허위기만정보 또는 편향성에 따른 오류를 바로잡는 등, 자동화된 팩트체크 도구로서 AI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스탠포드대학교, 2022)

허위기만정보 대응방안

허위기만정보 종합대응책, 입법공백 분야 발굴 및 논의, 넛지 방식에 근거한 정책 마련, 허위기만정보 퇴치를 위한 R&D 지원 강화, 허위기만정보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연구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 허위기만정보 종합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 허위기만정보가 ICT 신기술로 무장하며 세력을 확대함에 따라 사회 신뢰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위협을 받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허위기만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부재한 상황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허위기만정보 실태 조사,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 지원, 허위기만정보 처벌을 위한 공적역량 강화, 정보 분별력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한 법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지점을 발굴할 것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요청권 등,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 및 후보자 비방죄를 처벌하고 있음
 - 또한, 개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허위기만정보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음
 - 이에, 허위기만정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유포되는 허위기만정보 유형의 다양화, 영향력 확대, 진위여부 판별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법률로 대응이 어려운 공백이 엄연히 존재
 - ※ 최근 유포되는 허위기만정보는 단순 유언비어에 그치지 않으며, 혐오를 조장하고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생성·유통되고 있음
 - 혐오표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생성·유포되는 허위기만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허위기만정보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개인, 집단, 기업, 사회, 국가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나 집단, 사회, 국가의 피해구제 및 법적 대응 방식은 모호한 상황
 - 기존과는 달라진 허위기만정보의 특성과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허위기만정보 대응을 위한 넛지 정책 마련

-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존재이므로 모든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진위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함
 - ※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과 다른 견해를 담은 정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정보에 대한 편향성을 지닌다는 점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짐
- 넛지 정책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교정해주는 방식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략임
 -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백신접종이 감염위험을 낮추어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법임에도 백신접종에 대한 높은 반감이 있었음. 이러한 반감을 덜 자극하며 접종을 유도하는 잔여 백신 예약 전략은 한국인의 경쟁심리를 자극하여 접종률을 높인 성공적인 넛지전략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었음
- 넛지 정책은 또한, 적은 비용으로 기존 인센티브 정책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개인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는 시발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허위기만정보가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넛지 정책은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개별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허위기만정보는 '정보량 효과', '진실 착각효과' 등,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인지를 조작(인지적 해킹)하여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줌
 - ※ 즉, 인간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강화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넛지 정책을 설계하여 자신도 모르게 허위기만정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nudge)하는 개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온라인 정보에 대해 정확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공유하는 정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 (Pennycook 등, 2021)
 - ※ 그러나 ICT 신기술로 교묘하게 인지적 해킹을 시도하는 허위기만정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수준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허위기만정보 퇴치를 위한 R&D 지원

-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허위기만정보가 ICT 신기술로 무장하여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 집중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허위기만정보를 대응할 수 있는 R&D를 지원 및 수행하고 있음
 - ※ EU는 Horizon 2020 프로젝트를 통해 허위기만정보에 대응하는 R&D 기금을 약 800억 유로(약 102조 5천억원) 규모로 조성
- 국내에서는 법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술적으로 허위기만정보를 대응할 수 있는 R&D 아이টে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편

※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AI의 편향성을 줄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AI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해옴

- 허위기만정보를 자동 식별하고 위험성을 경고하며, 유통경로를 추적 및 확인하는 등, 허위기만정보 퇴치와 관련된 R&D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이 필요
- 향후 우리나라가 허위기만정보 대응 기술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며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허위기만정보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연구 지원

- 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개인, 기업, 사회가 허위기만정보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Lazer et al., 2018)
- 사회 및 문화적 특징에 따라 허위기만정보의 콘텐츠가 생성 및 유포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허위기만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적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절실함
- 국내에서 유통되는 허위기만정보의 특징, 확산 메커니즘, 영향력 수준 등을 연구하며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과학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넛지 정책을 설계할 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개인이 스스로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지원할 것이 요구됨

- 허위기만정보는 특수한 맥락에서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여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넛지 정책을 통해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감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과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것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허위기만정보에 대한 방어력 수준 차이는 디지털 격차와도 관련될 수 있음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허위기만정보 대응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1] 현대경제연구원 (2017),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736, 17-11.
- [2] Pennycook et al (2021), Shifting attention to accuracy can reduce misinformation. Nature, 592, 590-595.
- [3] Lazer et al. (2018), The science of fake news, Science, 359, 1094-1096.
- [4] 스탠포드대학교 (2022), <https://www.whitehouse.gov>.
- [5] OECD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6]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 [7] 대한상공회의소 (2016),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 [8] KIAT (2022), 독일의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AI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 [10] 국회입법조사처 (2020),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가짜뉴스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12] 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미디어와 인격권, 5, 43-82.
- [13] 국회입법조사처 (2019), 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 [1] 이성준,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스마트 돌봄/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 [2] 안춘모, 모든 국민의 성장 기회로서 디지털 역량 강화
- [3] 정지형,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
- [4] 연승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디지털 소통의 도전과 대응
- [5] 송근혜, 신뢰사회를 저해하는 허위기만정보 대응방안
- [6] 연승준, 디지털 안전 사회
- [7] 김성민, 디지털로 다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성장
- [8] 김태한,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 [9] 안춘모, 안심하고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 안전망 구축
- [10] 송근혜, 디지털 플랫폼 정부
- [11] 김태완, 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
- [12] 최새술,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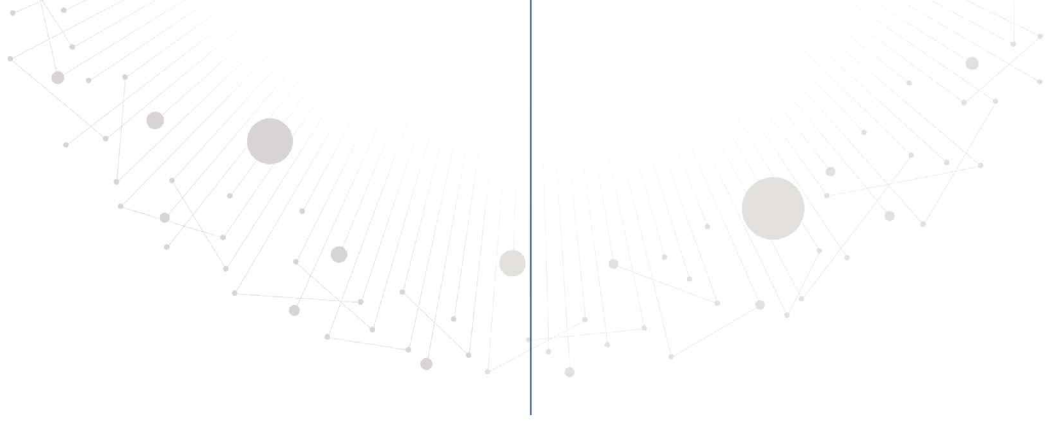
저자소개

송근혜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지능화정책연구실 연구원
e-mail: ghsong0227@etri.re.kr Tel. 042-860-6702

기술정책연구본부 기술정책 브리프

발행인 이 지 형
발행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발행일 2022년 07월 31일





www.etri.re.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042) 860-6114 FAX.(042) 860-6504

